

교육부, “초·1·2학폭있어도 바로 분리안한다”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2029년까지 2배로 확대해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초등학교 1·2학년 간에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숙려기간 도입을 통해 관계회복을 우선 지원한다. 지난해 신설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2029년까지 2배로 확대해 위기·피해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생·교원·학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1일 제20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5차 기본계획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현장의 의견과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했다.

내년부터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학생 간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 동의 없이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적으로 도입, 교육적 회복 노력을 강화한다.

2023학년도 학교폭력 심의 건수 2만3579건 가운데 초·1·2학년 심의건수는 1174건이다. 심의 결과 학교폭력이 아닌 건수는 293건으로 전체 25.0%를 차지했다.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에 앞서 숙려기간을 갖도록 해 학생들이 관계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학교에서의 관계회복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관계개선 지원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담당교원에 대한 연수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의 객관성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사안처리 지원을 위한 교원 자원(컨설턴트) 기능을 새롭게 추가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전담조사관 대상 교육과정도 수준별로 개발한다. 또한 가해학생 조치 사례를 분석한 안내서를 보급해 위원회별·지역별 심의 결과의 편차를 줄일 계획이다.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학교 구성원이 협력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작년에 신설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2029년까지 2배로 확대해 위기·피해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양상 변화 등에 대응해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개편하고, 특별교육을 전문화해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한다. 변화하는 교육환경, 사안의 특성과 중대성을 반영한 조치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출석정지(6회) 이상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법무부·경찰청 등과 연계해 차별화된 특별교육 실시 방안을 마련한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생·교원·학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어울림+'로 확대한다. 대상별로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 콘텐츠로 제

공해 학교에서 활용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2027년부터 전환학년인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어울림학기제를 시범 운영해 '어울림+'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어울림과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해 학생의 정서적 성장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교원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된다. 상담·치료, 제지, 개별학생교육 지원 등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활동에 대한 법률 근거가 추가됨에 따라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필요 경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유관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체 직장연계 학부모교육을 실시하고 '함께학교플랫폼'을 통해 전문가 상담과 정보 공유를 지원한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폭력없는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문화 책임규약 거점학교'를 지정하고 2029년까지 2000개교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감·지자체의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실태조사를 개편한다. 또한 지역기관·지역대학 등을 학교폭력 관련 상담·연구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자체-경찰청-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역별 학교폭력 특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경보'를 발령해 가정과 학교에 예방 및 대응 정보를 제공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일상적인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이번 5차 기본계획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권기자



완도해경, 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길규)는 본격적인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앞두고,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상레저 기구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



신안소방, 군청 복지기동대와 생활안전서비스 활동

신안소방서(서장 류도형)는 최근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안전서비스-홍보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



담양소방, 봄철 화재예방을 위한 학교 기숙사 화재안전조사 실시

담양소방서(서장 이중희)는 봄철 화재예방의 일환으로 학교 기숙사 3개소(담양고·솔가람고·한빛고)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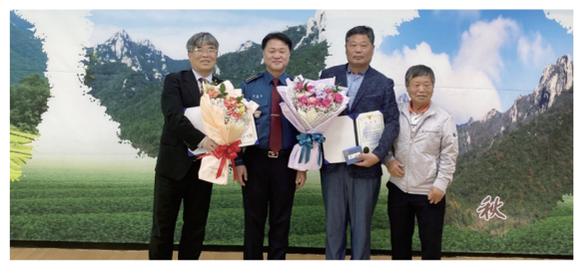
함평소방, 함평읍이장단과 이·통장 협의회 추진

함평소방서(서장 김광선)는 지난 4월 22일, 함평읍이장단과 이·통장 협의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춘기자



나주경찰, 2025년 상반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나주경찰서(서장 권석진)는 지난 4월 28일 나주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나주=송준표기자



강진경찰, 주민참여 '함께 하는 치안 이야기' 개최

강진경찰서(서장 김태형)는 협력단체 및 지역 내 마을을 방문하여 치안정책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 중심의 간담회인 '함께 하는 치안 이야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피해자 4000명·피해액 120억’...사기 혐의 여행사 대표, 징역 7년

법 “피해자들의 상실감, 경제적 피해 못지 않아”

후불제 여행 방식을 미끼로 100억원이 넘는 고객들의 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30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불제 여행사 대표 A(5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지 않는 한 후불제 여행 상품으로는 사업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피고인은 회원들의 납입금을 이용해 과거 크루즈 사업을 진행했지만 약 80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적자를 보는 상태였음에도 계속해서 다른 사업을 진행하거나 신규 회원을 유치했다”

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해약금 지급이나 여행 제공이 어려운 여행사 사정을 알면서도 신규 회원을 유치해 ‘돌려막기’ 식으로 이를 대처했다”며 “피해자들은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첫 해외여행, 가족여행, 퇴직여행을 꿈꿨지만 여행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해약금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느낀 상실감, 허탈감, 배신감은 이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 못지않게 매우 크다”며 “수사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했지만 피해회복이 아직도 없는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후불제 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들

로부터 납입금 12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든 여행 경비를 납입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만을 납부하면 여행을 먼저 보내고 여행 뒤에 남은 경비를 고객들이 지불하는 후불제 여행 상품을 운영 중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해당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매달 여행사에 돈을 납부하면서도 정작 여행은 가지 못하고 이에 반발한 고객들의 환불 요구도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A씨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만 4000여명, 피해액만 약 120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호기자



‘초여름 날씨, 나무그늘 아래 휴식’

서울 낮기온이 26도로 초여름 더위를 보인 지난날 30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시민들이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다.

‘농구교실 자금 횡령’ 강동희 전 감독 징역 1년2월 선고

1억원대 농구교실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강 전 감독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달 28일 강 전 감독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날 강 전 감독 측도 법원에 항소했다.

강 전 감독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일부도 항소한 상태다.

이들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1명에게 징역 1년을, 다른 관계자 3명에게 징역 9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피해회복 구제를 위해 강 전 감독 등 2명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월부터 10월 사이 농구교실의 법인 운영비 1억8000여만원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목적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2021년 3월 해당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0월 강 전 감독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강 전 감독은 2011년 일부 경기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2013년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한국농구연맹(KBL)은 강 전 감독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다.